



정부는 지방정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 보조율을 결정하였습니다.

<보도내용>

□ 2026.4.5.(일) 뉴시스는 「'국민 70%에 최대 60만원' 중 지방비 1.3조...지자체 부담↑」 기사에서 “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... 국고보조율은 90%(서울 75%)로 조정됐고, ... 이번 정부안에서 또다시 80%로 낮아진 것”, “매번 국고 보조율을 서울과 나머지 지자체로만 구분해 차등화할 뿐,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정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보조율을 결정함에 있어, 지방정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.
 -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보강이 추경에 따른 지방의 대응지방비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이루어지므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입니다.
- 향후 집행 과정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

기획예산처	예산실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국민복지예산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진민규 (044-214-2910) 김준성 (jsjohn@korea.kr)
행정안전부	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	김수경 (044-205-3702) 강민철 (kmc0608@korea.kr)